전주매일 CMY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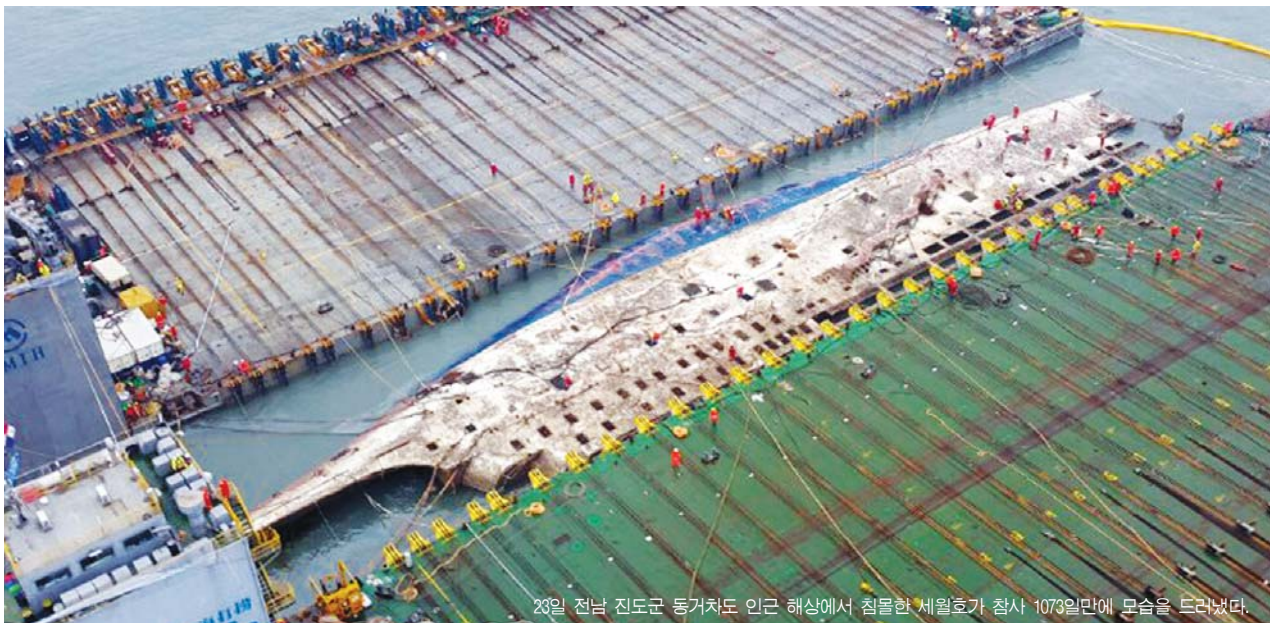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음 2월 27일) 제1773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3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참사 107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 1073일 만에 '수면 위'

유가족들 "선체 온전히 인양해야"

3년 전 승객 304명과 함께 바닷속으로 모습을 감춘 세월호가 참사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3면〉

인양이 결정과 시도 과정에 강풍과 거센 물살의 영향을 받아 중단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국민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 선체 일부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세월호 선체는 23일 오전 3시45분께 선체의 구조물이 물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10시께 수면 위 2m까지 끌어올려 졌다. 오후 2시께는 선체가 수면 위 6m 까지 부상했으며, 오후 5시께 수면 위 8.5m까지 상승했다.

24일부터는 소조기가 끝나 사고해역의 물살이 다시 거세지기 때문에 반잠수정 거치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월호는 반잠수정에 선적되면 80㎞의 항해를 거쳐 목포신항에 도착한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국민조사위원회, 4.16연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세월호 인양 미수습자 수습, 선체 조사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 박흥석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 장완익 전 특조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표창원·박주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미수습자 수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육상 거치 후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최선이자 마지막 증거물인 선체를 온전히 인양해야한다고 반발했다. /안재용 기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선제 대응

▶ 도, 중앙부처 활동 전개

송 지사, 기재부 등 방문 동학혁명기념공원 조성 등 4개 현안 정책적 지원 요구 전북 몫 찾기 지원도 당부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 중점사업 및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부처별 예산 편성 전에 한발 앞서 지휘부가 총출동해 대대적인 중앙부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2일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일제히 부처 실무 국과장 및 사무관까지 만나는 활동을 한데 이어 23일에는 송하진 지사까지 발 벗고 나섰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 해수부 항만국장,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국토부 철도국장,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등 전북도 핵심사업 중앙부처 주요 실국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사업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고 4월 24일경 부처별 한도액(실링)을 결정해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3월부터 실국별로 사전에 부처별 국가예산확보 활동 후, 미온적·부정적 사업, 현안사업 등 쟁점사업을 대상으로 송하진 지사 등 지휘부가 예산편성 전 부처 사전설득 작업을 펼쳐 부처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송 지사는 기재부를 방문해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전북도 유치 당위성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부지에 'NPS 복지플렉스 센터 건립' 필요성,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새만금 수목원 조성,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 3개 사업의 예타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기재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으며, 전북 몫 찾기를 위한 '새정부 출범을 대비한 전북의 대도약 현안과제'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해수부 최명용 항만국장을 만나, 새만금 산단 내 국내외 투자기업 수출입 물동량 처리와 중국진출 전진기지로의 활용을 위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2020년까지 4선석이 준공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잇달아, 해수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내변산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곰소 천일염 6차 산업'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부 방문에서는 현재 새만금 외측 어선 수용능력이 부족한 '가력선착장 확장개발'의 시급성과 '금강3지구 대단위 종합개발사업' 지원의 필요성, 매년 AI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김제 용지의 '친환경축산 개편사업'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설명했다.

국토부 방문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녹색교통시스템인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과 현재 안전에 문제가 있는 김제육교 재가설,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요구했고 새만금~대야간 철도건설과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를 방문해 첨단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 예타 통과를 건의했고, 전기상용차의 시장 확대에 대비한 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상용차 경량차대 개발과, 컨테이너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고효율 경량스마트 컨테이너 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 지사는 오는 28일에도 부처 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사업 중심으로 6개 부처 실국장을 대상으로 활동할 계획이며, 정무부지사는 4월초 산업부, 미래부를 중점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4월과 5월초에 부처별 국·과장·담당자를 대상으로 실국에서 2회 이상 방문해 국가사업으로의 필요성 및 우리 지역의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적인 설명활동을 추진한다. /안재용 기자

매일 INDEX

3면 - 문재인, 전북 방문

본 사 인 사

▲김판곤
임 : 이사 겸 취재본부장
명 : 군산본부장

〈3월 24일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반대한다"

비상대책위, 철회 촉구

부안·고창 어민들이 해상풍력단지 조성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부안·고창 어민들로 구성된 서남해 해상풍력비상대책위(부안위원장 김인배, 고창위원장 이성태)는 부안예술회관에서 김진태 부안 수협장을 비롯하여 김광철 군산 수협 조합장, 김영식 고창 수협 상임이사, 이호근 전북도의회 의원,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원, 오세준 산림조합장 및 어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적극 반대했다.

서남 해 해상풍력비상대책위는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은 그 동안 우리가 지키고 아껴온 바다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수산 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우리 수산인들은 소중한 바다를 지키려고 서남해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부안·고창 앞바다는 천혜의 자연어장으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주요 어종의 회유장소로 수산업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곳이다며 "앞으로도 어업 인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서남해해상풍력단지 건설을 강행한다면 우리 어업인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김인배 부안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원이란 미명하에 서·남해 풍력단지를 위도와 고창 사이 바다 한가운데에 1단계로 실증단지 사방 5km 면적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 추진하고 있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바다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하려고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진태 부안수협장도 "칠 산 앞바다는 천혜의 어장을 이루는 곳이며 주요 어종의 회유장소로 어업 인의 생활 터전이자 수산업을 유지하는 중요한 바다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닌 곳"이라며 "수산 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교란,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해상풍력단지 건설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